

공공심야약국 확대 치료받을 권리 보장

강동화 도의원, 5분 발원 통해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도 차원 핵심과제 제시 “도내 14개 시군 중 5개 군단위 지역은 ‘제로’... 도민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내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니라, 야간 보건상담과 의약품 오남용 중재, 응급 시 보건의료기관 안내까지 맡는 지역의 1차 보건의료기관”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공공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 도내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단 13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고창, 무주, 임실, 장수, 진안 등 5개 군 지역은 단 한 곳의 공공심야약



국도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심야 시간 의약품 접근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강 의원은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약 한 알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는 단순 불편을 넘어 생명에 직결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해 전북자치도에 세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전북자치도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주

장이다. 강 의원은 “인구수, 고령화율, 의료취약도, 응급실 이용률, 야간 약국 수요 등 종합적 지표를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심야약국 설치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조례 시행을 위한 하위 기준과 절차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2024년 5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까지 약국 지정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1년 넘게 구체적 실행 기준이 없는 상태는 무책임하다”며 “도지사는 관련 기준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셋째, 약사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심야약국 참여 약국을 적

극 모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 의료사각지대인 군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이제 더 이상 늦은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며 “체계적 계획 수립, 과감한 투자, 지역 맞춤형 접근성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확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에게는 ‘아플 권리’가 아닌,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공공심야약국 확충이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닌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선제적 정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도의회의 입법·감시 기능을 넘어,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의회의 적극적 역할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평가된다.

앞으로 전북자치도 차원의 공공심야약국 확대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당신들이 감내해야 할 일 아니다”

김희수 도의원, 이동노동자 처우 개선 호소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쉴 곳 하나 없는 노동. 그것을 두고 ‘당신들이 선택한 길’이라 말하는 건, 사회가 행하는 폭력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25일 열린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거리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며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책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북의 이동노동자가 약 2만9,000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위한 쉼터는 거점형 1곳, 간이형 3곳뿐이라며 “그들의 노동은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중체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쉼터 확대, 버스승강장 등 공공시설의 임시 쉼터 지정, 민간 시설과의 협력, 산재보험 지원 확대, 복합 거점형 쉼터 조성 등 5가지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있는 자원부터 지혜롭게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단지 몸을 쉬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까지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필요하다”며 “전북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단순한 정책 제안에 머물지 않고, 이동노동자들을 향한 인간적인 시선과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진심 어린 외침으로 도민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만호 기자



전북 전북지부 등 농민단체들이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유임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유임, 농민에 대한 배신”

전북 농민단체들, 즉각 철회 촉구... “송 장관, 농업 파탄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어”

전북지역 주요 농민단체들이 2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유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전농전북도연맹, 전농전북연합, 쌀생산지협회 전북본부, 한우협회 전북도지회,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실천 전북개헌운동본부 등 5개 농민단체 임원과 회원 20여 명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장관의 농정을 주도한 송미령 장관을 이재명 정부가 유임한 것은 농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오은미·오현숙 전북도의원도 함께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단체들은 “송미령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보호 관련 4개 법

안을 ‘농업을 망치는 망사법’이라며 반대한 인물”이라며, “쌀값 보장 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식의 발언으로 농민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생산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졸속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추진해 재해 대응 예산을 낭비했으며, 농지 규제 완화로 투기 자본의 배반 불렀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농정’을 이끈 핵심 인물로, 농업 파탄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주권 실용주의’ 철학에 송미령 장관이 과연 부합하는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적재적소에 인

재를 써야 한다는 인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참석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선두에 섰던 농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실망하며 ‘죽 썩어 개 됐다’고 한 바 있는데, 이번 유임을 지켜보는 농민들은 또다시 그 말을 되풀이하게 생겼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단체들은 “송 장관의 유임은 농민뿐 아니라, 농업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싸운 민중에 대한 배신”이라며, “정부가 끝내 유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투쟁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식품 부장관을 유임 결정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포용적인 지역사회 구성에 한걸음 더 | 제26회 전북여성대회 성료

전북특별자치도가 여성이 주도하는 연대와 화합을 통해 포용적이고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갔다.

전북자치도는 25일 김제시체육관에서 제26회 전북여성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북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미자) 주관으로 열렸으며, 도내 34개 여성단체와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정성수 김제시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여성대회는 전북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대외 행사로,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는 ‘더 큰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여성과 함께’라는 주제로 김제시에서 개최됐으며, 2023년 익산, 2024년 군산에



25일 김제시체육관에서 제26회 전북여성대회가 열린 가운데,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시군 순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여성단체 입장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기념촬영, 교류 오찬, 화합한 마당이 이어졌다. 특히 오후에는 난타 공연과 공 굴리기 등의 체험행사를 통해 여성 간 연대감을 다졌으며, IOC의 Let's Move 캠페인에도 영상으로 참여

해 전주올림픽 유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개인 SNS를 통해 확산시켰다.

이번 대회는 전북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단결된 모습으로 지역 내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만호 기자

이명연 전북자치도의원 “내란법 사면 금지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발의한 ‘내란법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열린 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행 사면법은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내란법에 대한 사면금지 조항은 부재하여 대통령의 헌법적 권능인 특별사면권이 내란범에게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명연 의원은 “민에 하나라도 실현될지 모를 내란범에 대한 사면은 사면법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은 대통령도 내란과 외환죄에 대해서만큼은 불소추 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내란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인구정책 실종... 책임·변화 없다”

김명지 도의원 “정확한 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도의원이 25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에서 민선 8기 전북자치도정의 인구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북 인구가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1만6,067명이 줄며 감소율 -0.92%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다”며, “그럼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주의 경우 민선 8기 시작 직전인 2022년 6월 65만명 수준이던 인구가 2025년 5월 기준 63만명으로 줄며 월 600~1,000명대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는 지방재정 수입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직결되지만, 전북도는 생활 인구에만 집중하며 재정 영향 분석은 외면하고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허한 연구와 정책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도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지하의 안전은 곧 지상의 안전

싱크홀 사고 대응 형식보다 실질

장연국 도의원, “실행 중심 안전관리체계로 전환을”

첨단 탐사장비 활용 조사·지하안전지도 제작 등 강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25일 열린 제419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싱크홀 사고에 대해 형식적인 대응을 넘어서, 실행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북자치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사업장을 방문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노암동 청년 셰어하우스인 ‘피움하우스’에서 청년들에게 자가의 공공주택 임대라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모집인 선정에 신경 써 줄 것과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운봉읍 용산리 지리산 활력타운과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남원청년피움공간 in 지리산(고향올래) 조성 현장에 들러 추진현황을 듣고 지리산 활력타운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입주자를 먼저 선정하여 마을민들기에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의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며 제273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레씩 서면으로 심의만 진행했으며, 2023년 구축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력체계도 지금까지 한 차례의 간담회만 열린 것이 전부였다.

또한, 지하안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최근 5년간 현장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지하시설물은 총 41,198km 달하며, 이 중 21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은 45.0%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내년까지 2,031km에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전체 시설물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연국 의원은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해 GPR(지표투과레이더), AI 등 첨단 탐사 장비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민이 지하 안전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지도도 제작하고,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하의 안전은 곧 지상의 안전”이라며, “전북자치도는 보여주기식 계획과 형식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실행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과감히 전환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사전 대비와 관리만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